

주간 통일정세

2016-38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9.17	北최선희, 베이징경유 스위스행...제네바 안보기관회의 참석(연합뉴스)
		北 제재국면서 잇단 국제행사...어떻게 치르나(연합뉴스)
	9.18	北김정은, 수해 피해지 시찰 없이 굴착기만 전달(연합뉴스)
		北김정은, 핵실험 후 민생행보 지속...과수농장 시찰(연합뉴스)
	9.19	北 김영남, 비동맹운동 회의서 핵 보유 당위성 강조(연합뉴스)
		北매체들, 홍수피해 복구 성과 소개...유실된 철길 개통(연합뉴스)
	9.20	北리용호 외무상 미국 도착...안보리 제재 질문에 '묵묵부답'(연합뉴스)
		北 김영남, 비동맹운동 회의서 7개국 수반과 회담(연합뉴스)
	9.21	리용주 北 해군사령관, 5개월만에 공개석상에 등장(연합뉴스)
		北노동신문, 과학자 동원해 연일 '핵능력' 선전(연합뉴스)
조선신보 "탄도로켓과 우주로켓은 다르다" 주장(연합뉴스)		
9.22	北김정은 핵실험 관계자들과 기념사진...국가핵무력 강화(연합뉴스)	
	北매체, 홍수피해 무산군에 식수 전력 공급 재개(연합뉴스)	
9.23	北신문, 홍수피해 50여개 농촌에 통신·방송망 복구(연합뉴스)	
경제	9.21	북한, 對中수출 절반이 광물자원...납광·마그네시아 수출↑(연합뉴스)
	9.22	홍상 조사에도 中 대북제재 여전히 '느슨'...8월 대북수출 42%↑(연합뉴스)
사회 문화	9.18	北주민들, 핵실험에 불안감...성과에는 무관심(연합뉴스)
	9.21	평양여성도 미니스커트에 하이힐...리설주 따라하기 열풍(연합뉴스)
	9.23	北, 홍수로 잠자던 국경경비병 수백 명 사망·실종(연합뉴스)
9.17	라오스 대통령, 北김정은에 홍수피해 위로 전문(연합뉴스)	
	美·中 안보리 상임국 북핵 규탄...“북, 6자회담 재개 호응하라”(연합뉴스)	

외교 국방	9.19	北 풍계리 핵실험장 서·남 강도서 언제든 추가 핵실험 가능(연합뉴스)
		美상원의원 19명, 오바마에 연명서한...중기업제재-사드배치 촉구(연합뉴스)
		아사히, 中 대북제재 민생제외 시사...석유수출금지도 노코멘트(연합뉴스)
		中, 북핵문제 관련 냉정한 현실 인식해야(홍콩 SCMP)
		반기문, 北핵·미사일 심각 우려...강경·분명한 의지 보여야(연합뉴스)
	9.20	北, 5차 핵실험은 핵능력 강화조치의 절정...美본토 타격권(연합뉴스)
		北, 美 시리아 정부군 오폭 비난...“의도적 침략행위” 주장(연합뉴스)
		美폭격기 B-1B 내일 한국 착륙...北핵실험 응징 의지(연합뉴스)
		中 사법당국, 대북무역회사 불법거래혐의 조사(연합뉴스)
		中, 미국이 北핵시설만 타격시 묵인...감정은 버릴 준비됐다(연합뉴스)
		北, 옛소련 벨라루스에 대사관 개설 추진...외교고립 탈출 시도(연합뉴스)
	9.21	北, 신형 위성로켓 엔진시험 대성공...장거리 미사일 도발 예고(연합뉴스)
		오바마 “북한, 핵실험 대가 치러야...모두를 위협하게 해”(연합뉴스)
		美, 北ICBM용 로켓엔진시험에 “추가도발 용납못해...도발 삼가라”(연합뉴스)
		北 ICBM 결국 개발할것...北정지례도 주장 사실이면 美에 도달(연합뉴스)
		美국방, 주한미군에 “북핵 위협 맞서 최적의 대응태세 갖춰야”(연합뉴스)
		중국 ‘북핵 연계 의심’ 홍상그룹 중징계 예고...문단을들(연합뉴스)
		中, 단둥 무역회사 10여곳 대표 체포...독자제재 시작했나(연합뉴스)
		제2 홍상 나오나...中언론 “새 대북제재 필요·핵 모험 해롭다”(연합뉴스)
		중국정부,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 관련 우려 표명(연합뉴스)
		메이·아베 유엔서 정상회담...강력한 대북제재 공조 다짐(연합뉴스)
		일, 북핵·미사일 맞서 미사일 방어망 확충 검토(연합뉴스)
		G7 외교장관, 北도발 맞서 중대한 추가 조치 취할 것(연합뉴스)
		이집트·볼리비아·탄자니아...옛 친북국가 북핵실험 규탄 동참(연합뉴스)
		美SIS, 北영변 핵단지 활동 지속...재처리 일단 종료된듯(연합뉴스)

9.22	北 풍계리 3번 궤도에 위장막...핵·미사일 연쇄도발 가능성(연합뉴스)
	美 태평양사령부 “전략폭격기 B-1B, 군사분계선 최근접 비행”(연합뉴스)
	리커창 中총리, 유엔총회 연설서 북한제재의 ‘제’자도 안꺼내(연합뉴스)
	요미우리 “마샤오홍 홍상 총재, 北장성택 중국 측 파트너”(연합뉴스)
	北中 접경교류 다시 냉각조짐...10월 북중박람회 취소가능성(연합뉴스)
	아베 “北 위협 새로운 차원...일본, 새 고강도 제재 주도할 것”(연합뉴스)
	아베, 中에 “대북문제 연대를”...이란엔 “北과 군사협력 단절을”(연합뉴스)
	北, 벨라루스에 대사관 개설...벨라루스는 부인(연합뉴스)
	핵실험금지조약 40여국, 유엔서 “北 핵실험 중단하라”(연합뉴스)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北 김정은에 홍수피해 위로 전문(연합뉴스)
9.23	백악관, 北공습질문에 일반론 전제해 “선제공격 미리 논의안해”(연합뉴스)
	北주민에 바깥세상 알릴 아이디어 공모...美 北 흔들기 속도전(연합뉴스)
	美 北 ‘서울불바다’ 위협에 “도발적 발언 자제하라”(연합뉴스)
	중견국협의체 ‘딕타’ 외교장관 “北 추가도발 말라” 성명(연합뉴스)
	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지지 안보리 결의안 채택 무산 위기(연합뉴스)
	핵 전문가 “北, 이른시기에 6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연합뉴스)
	美전문가 “北 대출력 로켓엔진, 소형 달탐사선 발사에 충분”(연합뉴스)
	北, 구소련 재래식 무기 재활용해 핵실험·미사일 발사(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9. 18.

■ 北김정은, 수해 피해지 시찰 없이 굴착기만 전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함경북도 지역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피해 현장은 찾지 않은 채 복구작업용 굴착기만 보낸 것으로 보임.
- 북한 조선중앙TV는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 전투장들에 보내주신 유압식굴착기가 청진시에 도착했다”며 “유압식 굴착기 전달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김정은은 지난 9일 5차 핵실험 이후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홍수 피해 현장을 찾았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음.

■ 北김정은, 핵실험 후 민생행보 지속…과수농장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9일 제5차 핵실험 이후 3차례 공개활동을 모두 민생행보로 채우며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음.
-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탈바꿈한 강원도 고산군 소재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시찰(현지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이날 시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수행했으며, 현지에서 함중철 노동당 강원도 고산군위원회 위원장 등이 김정은 일행을 맞았음.

2016. 9. 22.

■ 北김정은 핵실험 관계자들과 기념사진…국가핵무력 강화(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9월 9일 실시한 5차 핵실험 관계자들과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핵보유 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서 보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함.
- 사진 촬영에는 리만건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함께함.

통신은 사진을 촬영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9. 17.

■ 北최선희, 베이징경유 스위스행…제네바 안보기관회의 참석(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북한 측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NHK가 1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날 평양에서 출발한 최 부국장은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北京) 공항에 모습을 드러냄. 최 부국장은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것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반응했으나 여타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마중 나온 주중 북한대사관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남.
- 외교소식통은 최 부국장이 다음 주 스위스에서의 안보 관련 국제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스위스 제네바의 이 안전보장 연구기관은 회의와 관련 “비공식회의이므로 상세한 것을 사전에 밝힐 수 없다”고 반응함.

2016. 9. 19.

■ 北 김영남, 비동맹운동 회의서 핵 보유 당위성 강조(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보유의 당위성을 강조함.
-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최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 두폭발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 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며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1975년 비동맹운동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북한은 이듬해부터 대표단을 보내 비동맹회의를 체제 선전과 지지세력 확보의 장으로 활용해왔고, 이번 회의에는 김 상임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함.

2016. 9. 20.

■ 北리용호 외무상 미국 도착…안보리 제재 질문에 ‘묵묵부답’(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위해 20일(현지시간) 미국에 입국함.
- 리 외무상은 베네수엘라 포르라마르를 출발한 아루바항공 특별기를 타고 뉴욕의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 이날 새벽 2시 30분께 도착했다. 리 외무상은 18일 포르라마르에서 끝난 제17차 비동맹운동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 인사들과 함께 특별기를 이용함.
- 리용호 외무상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임. 유엔 안팎에서는 리 외무상이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의 자위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으며 위협이 계속될 경우 핵 및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겠다고도 피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리 외무상은 또 친북인사들이 주최하는 문화공연 등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양자회담 등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北 김영남, 비동맹운동 회의서 7개국 수반과 회담(연합뉴스)

-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18일 이란 베네수엘라 대통령, 쿠바 국가평의회 위원장 등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따른 북한의 핵 보유 당위성을 언급하며 비동맹운동과 회원국들의 상호관계 발전을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1975년 비동맹운동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북한은 이듬해부터 비동맹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음.

2016. 9. 21.

■ 리용주 北 해군사령관, 5개월만에 공개석상에 등장(연합뉴스)

- 지난 4월 이후 행적이 묘연했던 리용주 북한 해군사령관이 홍수 피해복구 군인 쫓기모임을 통해 약 5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냄.
- 조선중앙TV는 지난 20일 함경북도 연사군에서 홍수피해 복구 군인 쫓기모임이 진행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북한 해군 정복 차림에 대장 계급장을 단 리용주가 안경을 쓰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낭독하는 장면을 내보냄.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1일 “김명식이 지난 몇 개월간 주석단 해군사령관의 자리를 차지했던 점을 비롯해 여러 앞뒤 상황을 고려하면 리용주가 해임됐다가 해군사령관으로 복귀했다는 분석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다. 공식행사

2016. 9. 17.

■ 北 제재국면서 잇단 국제행사…어떻게 치르나(연합뉴스)

- 지난 9일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이달 중에 잇달아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어 정상 개최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림.
- 북한으로서는 이들 행사를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겠지만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적 고립이 극도로 심화하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옴.
- 조선중앙통신은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오는 16~23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최근 보도함. 통신에 따르면 최근 행사의 ‘선전화’도 제작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7일 “북한은 최대한 외국인의 참가를 이끌어 내서 핵실험 이후에도 국가가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선전하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한반도 정세나 북한의 국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9. 22.

■ 北매체, 홍수피해 무산군에 식수·전력 공급 재개(연합뉴스)

- 최악의 홍수피해를 기록한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일대에 대한 식수와 전력공급이 재개됐다고 북한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가 22일 보도함.
- 매체는 “얼마 전부터는 수원지에 쌓여있던 1만5천여 m³의 감탕(진흙)을 말끔히 퍼내고 피해 지역의 살림집들에 먹는 물(식수)을 보내주기 시작하였다”고 전함.
- 또 “무산군 송배전소 일꾼(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수백 대의 전주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설치하고 변전소도 복구함으로써 주민세대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복구 상황을 소개함.

2016. 9. 23.

■ 北신문, 홍수피해 50여개 농촌에 통신·방송망 복구(연합뉴스)

- 북한 매체는 최악의 홍수피해를 기록한 함경북도 일대 50여 개의 농촌에 통신·방송망이 복구됐다고 23일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체신성과 함경북도 체신관리국, 평양 빛섬유통신케블(광케이블)공장을 비롯한 체신부문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결사적인 전투를 벌려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이들의 노력으로) 얼마 전에 피해 지역의 50여 개 농촌리들과 체신분소들에 대한 통신, 방송망이 복구되었다”며 “지금 피해 지역에서는 당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으며 피해복구 전선에 급파된 방대한 건설력량(역량)들의 지휘통신이 원만히 보장되고 있다”고 소개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9. 19.

■ 북매체들, 홍수피해 복구 성과 소개…유실된 철길 개통(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고무산청년역-무산역 구간 철길이 복구돼 평양시간으로 지난 17일 오후 5시 홍수피해 후 첫 열차가 무산역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 승리(철도 개통)는 건설역량과 수단, 복구자재들의 수송속도를 비상이 높여 큰물피해를 많이 받은 무산군과 연사군에 대한 복구전투를 빠른 기간에 다그쳐 끝낼 수 있는 결정적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강조함.

2016. 9. 21.

■ 북노동신문, 과학자 동원해 연일 ‘핵능력’ 선전(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지난 9일 제5차 핵실험 이후 연일 과학자를 동원해 ‘핵능력’을 선전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김책공업종합대 학부장 김성원’이 기고한 ‘핵탄두’라는 제목의 글에서 핵탄두 관련 기술을 소개하면서 “탄도로켓 전투부(탄두 부분) 침투의 대기권 재돌입 기술은 현재 군사 대국들이라고 자처하는 몇개 나라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이라고 주장함.
- 북한 매체의 이러한 모습은 핵실험 성과를 통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선전의 일환으로 풀이됨.

■ 조선신보 “탄도로켓과 우주로켓은 다르다” 주장(연합뉴스)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1일 최근 북한이 진행한 로켓용 엔진 지상분출 시험과 관련해 “전쟁 억제력으로서 탄도로켓과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우주로켓은 그 개발과 발사 목적에서 엄연히 구별된다”고 주장함.
- 이어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소식에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박두했다’느니 뭐니 억지주장을 부리며 세계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조선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인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를堂堂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위성발사=탄도미사일 도발’의 딱지를 붙이고 조선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따르는 부당한 이중 기준의 극치”라며 “조선은 이를 공정성과 적절성,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적 문서장으로 낙인하고 전면배격하고 있다”고 비난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9. 21.

■ 북한, 對中수출 절반이 광물자원...납광·마그네시아 수출↑(연합뉴스)

- 북한이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대(對)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진욱 전문연구원은 21일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실린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유형 분석’ 논문에서 지난해 북한의 전체 수출액은 29억3천100만 달러로,

- 1998년 약 9억7천900만 달러에서 약 3배로 늘었다고 밝힘.
- 같은 기간 광물자원 수출 규모는 4천300만 달러에서 13억5천만 달러로 30배 넘게 급증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4%에서 46.1%로 뛴.
 - 남진욱 전문연구원은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납광과 마그네시아의 수출액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랴오닝성의 수입 수요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 지역의 수요가 더 늘면 이 두 광물이 북한의 중요한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봄.

2016. 9. 22.

■ **홍상 조사에도 中 대북제재 여전히 ‘느슨’…8월 대북수출 42%↑(연합뉴스)**

- 북한 핵개발 연계 의혹이 있는 중국 랴오닝(遼寧) 홍상(鴻祥) 그룹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고 중국 정부가 확인했지만, 중국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느슨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 22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전날 공개한 국가별 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8월 무역총액은 6억2천829만 달러(7천117억원)로 작년 같은 달 4억8천335만 달러보다 29.9% 증가함.
- 중국의 8월 대북 수출액은 3억3천695만 달러로 무려 41.6% 늘어났고 중국이 북한에서 들여오는 수입액도 2억9천134만 달러로 18.7% 증가함.
-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제재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단축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중국이 형식상의 제재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대북 압력을 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9. 18.

■ **北주민들, 핵실험에 불안감…성과에는 무관심(연합뉴스)**

- 북한 주민들이 최근 5차 핵실험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핵실험의 성과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주민은 아시아프레스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약 150km 떨어진 곳의 아파트 여러 채에 금이 가고 창문 유리가 깨졌으며 장마당에서도 떨림을 느낀 사람이 있었다”고 말함.
- 이 주민은 북한 당국이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의 성공을 김정은 정권의 위대성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은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2016. 9. 21.

■ **평양여성도 미니스커트에 하이힐…리설주 따라하기 열풍(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자유로운 패션스타일이 북한 여성들의 이목을 끌면서 이를 따라 하기 위한 열풍이 불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21일 보도함.
- 이 매체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을 인용해 “최근 북한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옷차림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김정은 부인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데일리NK는 “이외에도 리설주가 착용하는 유명 브랜드의 ‘짜퉁’ 제품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될 정도로 북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반지나 목걸이, 팔찌 등의 액세서리도 북한에서는 걸모양은 중국산으로 포장하고, 속 제품은 한국산으로 바꿔서 수입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덧붙임.

2016. 9. 23.

■ **北, 홍수로 잠자던 국경경비병 수백 명 사망·실종(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있는 국경경비부대 막사들이 최악의 홍수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잠자던 군인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23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이번 수해(홍수)로 일반 주민은 물론 두만강 연안 수백 명의 국경경비대 군인들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면서 “특히 두만강 기슭마다 위치한 소대 병실(막사)들이 두만강 급류에 순식간에 무너져 그 안에서 자고 있던 군인들이 무리 죽임(떼죽음)을 당했다”고 전함.
- “평양에서 내려온 간부들은 실종 군인보다 무기나 탄약을 찾는데 더 급급해 한다”면서 “(주민들은)사망자와 실종자 대책은 안중에도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임.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9. 19.

■ 美상원의원 19명, 오바마에 연명서한…중기업제재-사드배치 촉구(연합뉴스)

- 미국 상원의원들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를 촉구하는 연명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보냄.
- 이 서한은 특히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더불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도 제재하는 것) 시행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 특징임.
- 연명서한은 ▲중국 소재 단체의 북한 관련 불법행위 연루 정보 입수 여부 ▲중국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불이행 분야 ▲악의적 사이버 행위 관련 기업에 대한 미제재 이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미국 독자제재가 북한 정권의 사치품 확보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지 여부 ▲북한 고려항공의 불법행위 연루 여부 및 제재를 위한 수사개시 여부 ▲미 정부의 북한 국내외 강제노동 차단 노력 여부와 더불어 정치범 수용소 또는 강제노동 수용소 지원 관련 단체에 대한 제재대상 지정 추진 여부 등 6개 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함.

2016. 9. 20.

■ 北, 5차 핵실험은 핵능력 강화조치의 절정…美본토 타격권(연합뉴스)

- 북한 매체는 20일 지난 9일 실시한 제5차 핵실험을 핵능력 강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절정’으로 평가하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위협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우리 공화국은 올해 초 첫 수소탄 시험을 성과적

- (성공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다발적, 연발적으로 취했다”면서 “이번 핵탄두의 위력 관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은 그 절정”이라고 주장함.
- 이어 “우리 혁명 무력은 미제의 핵항공모함이나 핵동력 잠수함 등이 투입된 적지역 항구들을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로켓들로 타격해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며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 작전지대인 미제 침략군 기지들은 우리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위협함.

■ 北, 美 시리아 정부군 오폭 비난…“의도적 침략행위”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최근 시리아 육군 기지를 오폭한 것에 대해 ‘의도적 침략행위’라며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17일 미군 전투기들이 시리아에서 정부군의 기지를 공습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며 “미국의 이번 공습은 실수가 아니라 주권국가에 대한 의도적인 침략행위로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함.
-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시리아에서 미국이 벌리고 있는 ‘반 테러전’이라는 것이 자주적인 시리아 정부를 전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함.

■ 美폭격기 B-1B 내일 한국 착륙…北핵실험 응징 의지(연합뉴스)

- 미국 괌 기지에 배치된 전략폭격기 B-1B 2대가 오는 21일 다시 한국에 출동할 것으로 알려짐.
- 지난 13일 B-1B 2대가 오산 공군기지 상공에 전개된 지 8일만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미국이 B-1B를 다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2016. 9. 21.

■ 오바마 “북한, 핵실험 대가 치러야…모두를 위협하게 해”(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경고함.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 제한(동결) 조치를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그리고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협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함. 이어 북한을 겨냥해 “이런 기본적인 합의를 깨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함.

■ **美, 北ICBM용 로켓엔진시험에 “추가도발 용납못해…도발 삼가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로켓의 엔진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선전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도발을 삼가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함.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북한의 로켓 엔진시험에 관한 보도를 봤다”면서 이같이 밝힘.
- 애덤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정권에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그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지금의 위험한 행보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 **北 ICBM 결국 개발할것…北정지례도 주장 사실이면 美에 도달(연합뉴스)**

-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관 내정자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결국은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함.
- 하이텐 전략사령관 내정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전망함.
- 그는 먼저 북한의 ICBM용 로켓 엔진시험을 거론, “오늘 아침에 북한이 새로운 대형 로켓 엔진 시험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김정은의 말대로 그것이 지구정지궤도에 도달할 능력을 갖춘 것이라면 이는 곧 미 본토에도 도달할 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그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美국방, 주한미군에 “북핵 위협 맞서 최적의 대응태세 갖춰야”(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최적의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함.
- 카터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후버연구소에서 미 국방정책을 설명하면서 “주한미군의 슬로건은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이라고 소개했다고 미국 보수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이 전함.

- 카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사태에 대해 “주한미군은 강력하고 동맹국 한국은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으며, 또 다른 동맹국 일본도 있지만 외교 상황은 암울하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과 함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 하고 있지만, 상황이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진단함. 그러면서 그는 강력한 억제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2016. 9. 22.

■ 美 태평양사령부 “전략폭격기 B-1B, 군사분계선 최근접 비행”(연합뉴스)

-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22일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전날 한국 전개 상황에 대해 “B-1B가 남북 군사분계선(MDL)에 가장 근접했던 비행이었다”고 밝힘.
- 미 태평양사령부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B-1B의 한국 비행 사진을 게시하고 이같이 설명함.
- 미국은 전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함.

2016. 9. 23.

■ 백악관, 北공습질문에 일반론 전제해 “선제공격 미리 논의안해”(연합뉴스)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일반론적으로 말해 작전 시안의 하나로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말하겠다”면서 이같이 답변함.
- 일반론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제공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 자체가 이례적임.

■ 北주민에 바깥세상 알릴 아이디어 공모…美, 北 흔들기 속도전(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북한 민심을 활용한 ‘북한 체제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붙이기 시작함.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에게 바깥세상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힘.
- 국무부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 대량 전자통신수단을 북한 주민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즉, 외국 영화나 한류 드라마 등 외부 세계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북한에 대량 배포하겠다는 것임.
-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고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업,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등에 160만 달러(약 18억 원)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 사업과 북한 개방 프로그램에도 각각 50만 달러와 55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3대 ‘북한 흔들기’ 사업에 총 265만 달러를 편성함.

■ **美, 北 ‘서울불바다’ 위협에 “도발적 발언 자제하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대해 도발적 발언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미 국무부 애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22일 VOA와 전화에서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도발적인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지키는 조치를 취하는데 집중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조정 회의를 여는 등 대북 제재에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양국간) 지속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 북·중 관계

2016. 9. 19.

■ **아사히, 中 대북제재 민생제의 시사·석유수출금지도 노코멘트(연합뉴스)**

-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대상에 민생 분야를 넣지 않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옴. 아사히(朝日)신문은 중국이 “핵 문제에 한정된(대북) 제재를 요구하며 올해 3월(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와 마찬가지로 민생 분야는 제재 대상에서 빼고 싶다는 생각을 시사했다”고 1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한미일 관계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제재 결의에 ‘동의한다’고 한 중국이지만 제재 내용에 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전했다”며 이같이 밝힘.
- 아사히는 “한미일은 중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대립하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할 수 없는 정치적 사정이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소개함.

■ 中, 북핵문제 관련 냉정한 현실 인식해야(홍콩 SCMP)

-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중국이 북핵 문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등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잇달아 게재해 주목됨.
- SCMP는 17일에 이어 19일에도 이런 내용의 칼럼을 게재함. 우선 이 신문의 칼럼니스트인 캐리 황 칼럼니스트는 이날 쓴 칼럼을 통해 200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의 제재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계속 위기를 초래했다며, 국제적인 노력이 실패하면서 강대국 간 협력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함.
- 앞서 왕상웨이(王向偉) SCMP 편집 고문도 17일 칼럼에서 북한이 붕괴하면 수백만의 난민이 중국에 유입되고 미군이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주둔할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북한 정권을 지지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이제 중국은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함.

2016. 9. 20.

■ 中 사법당국, 대북무역회사 불법거래혐의 조사(연합뉴스)

- 중국 단둥(丹東)에 있는 대북무역회사인 '홍상실업유한공사'(鴻祥實業有限公司)가 경제범죄 혐의로 중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RFA는 중국 언론을 인용해 "랴오닝(遼寧) 성 공안기관이 홍상실업유한공사와 관계 부문 책임일꾼들이 무역활동 중 엄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회사의 책임일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 앞서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 분야 연구기관(C4ADS)은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에서 발표한 '중국의 그늘에서'라는 제목의 대북제재에 대한 공동연구에서 라오닝홍상그룹을 대표적인 대북제재의 우회경로로 지목함.

■ 中, 미국이 北핵시설만 타격시 묵인...김정은 버릴 준비됐다(연합뉴스)

-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 시설을 타격할 경우 묵인할 방침을 세웠다고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가 20일 보도함.
- 중국시보는 외교 소식통과 학자들을 인용, 중국 정부가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버릴 준비를 마쳤다고 이같이 전함.
-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과 김 위원장을 제거하는 참수(斬首) 작전을 감행할 경우 중국 측이 묵인할 것”이라고 말함.

2016. 9. 21.

■ **중국 ‘북핵 연계 의심’ 홍상그룹 중징계 예고…문답을듯(연합뉴스)**

-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랴오닝(遼寧) 홍상(鴻祥)그룹이 중징계를 받아 문을 닫을 전망이다.
- 홍상그룹은 중국의 중견그룹에 불과하지만 대북 교역의 핵심 기업이라는 점에서 각종 물자가 필요한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베이징 소식통은 “사실상 홍상그룹 자체가 대북 무역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단둥 홍상산업발전유한공사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계열사들도 모두 북한과 교역으로 먹고살고 있다”고 전함.

■ **中, 단둥 무역회사 10여곳 대표 체포…독자제재 시작했나(연합뉴스)**

-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한 의혹이 공개된 홍상(鴻祥)산업개발공사 외에 중국 단둥(丹東)의 무역회사 10여 사 대표들이 무더기 체포된 것으로 전해짐.
- 21일 북중접경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공안이 무역과정에서 불법거래 등 중대한 경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8월 초 단둥에서 활동하는 무역회사 대표 10여 명을 체포해 조사 중임.
- 한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의 거둬들인 핵실험을 용인한다는 국제사회 시각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핵실험 연계 기업들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함.

■ **제2 홍상 나오나…中언론 “새 대북제재 필요·핵 모험 해롭다”(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이 이례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통해 핵 개발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음.
- 그동안 중국은 북한 핵 개발을 반대해왔지만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드물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특히, 향후 대북 제재가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는 등 최근 북한 핵개발 연계 혐의로 조사를 받는 홍상그룹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됨.

■ **중국정부,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 관련 우려 표명(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추가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21일 한반도

- 비핵화 입장을 재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특히, 중국은 22일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해 양국 회의 결과도 주목됨.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 후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중국 측 입장을 묻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2016. 9. 22.

■ 리커창 中총리, 유엔총회 연설서 북한제재의 ‘제’자도 안꺼내(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함. 하지만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새로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음.
- 리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대표 연설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 이슈를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함.
-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리 총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안보리는 물론 두 나라의 사법채널을 통해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최고 우방인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관측됨. 리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있게 움직여야 하며,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

■ 요미우리 “마샤오홍 홍상 총재, 北장성택 중국 측 파트너”(연합뉴스)

-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라오닝(遼寧) 홍상(鴻祥)그룹 오너 마샤오홍(馬曉紅·45·여) 총재는 과거에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측 파트너가 돼 석탄무역 등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큰돈을 벌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마샤오홍과 면식이 있는 무역업자는 장성택이 2013년 처형된 후 많은 중국 기업 기업이 거래를 중단했으나 “북한 측은 마 씨와의 관계 유지에 특별히 신경 썼다”며 마샤오홍과 북한의 연결 고리를 강조함.
- 이 무역업자는 “친족이 지방 정부의 대외 무역 담당 간부라서 인허가에서 여러 편의를 받았다”고 마샤오홍이 사업을 급성장시킨 특별한 배경을 설명함.

■ 北中 접경교류 다시 냉각조짐…10월 북중박람회 취소가능성(연합뉴스)

-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遼寧)성과 북한의 교류가 이달 들어 눈에 띄게 확대되는 움직임이었으나,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다시 냉각 조짐인 것으로 나타남.
- 북중접경의 한 관측통은 “작년까지 단둥시 정부 등 박람회 주최측이 행사 한달 전부터 박람회 내용을 공표하고 참가국, 전시품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올해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북핵사태 등으로 올해는 취소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봄.
- 또다른 관측통은 “북한 5차 핵실험과 단둥(丹東) 중국기업의 북핵 연계 의혹 등으로 현재 북중관계가 경색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양국의 전통적 우호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언제든지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함.

다. 북·일 관계

2016. 9. 21.

■ 메이·아베 유엔서 정상회담…‘강력한 대북제재’ 공조 다짐(연합뉴스)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제71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본부에서 별도 회담을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채택에 힘을 합치기로 함.
- 안보리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인식에 따라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보다 더 높은 수위의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음.

■ 일, 북핵·미사일 맞서 미사일 방어망 확충 검토(연합뉴스)

-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맞서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2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동을 고려할 때 미사일방어망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방어망) 부단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고다 유지(香田洋二)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핵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놓쳤을 때의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경험이 있는 나라인 만큼 BMD를 충실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말함.
- 반면 우메바야시 히로미치(梅林宏道)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 교수는 “BMD

투자에는 한계가 없다”고 지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 기술력은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BMD 확충보다는 인근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함.

2016. 9. 22.

■ **아베 “北 위협 새로운 차원…일본, 새 고강도 제재 주도할 것”(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북한의 위협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라면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대응법’을 촉구함.
-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이날 회원국 대표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훨씬 실제적”이라고 우려함.
- 북한의 군사도발을 ‘우리에 생기는 금’으로 정의한 그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계속 참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대응을 재차 촉구함.

■ **아베, 中에 “대북문제 연대를”…이란엔 “北과 군사협력 단절을”(연합뉴스)**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북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며 광복 행보를 보임.
- 2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리 총리와 몇 분간 서서 대화하며 북한 문제에 관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긴밀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언급함. 리 총리는 이에 “동북아시아의 문제는 일본과 협력하고 싶다”고 반응함.
- 아베 총리는 또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선 북한과의 군사협력 단절을 요청한 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함. 이에 로하니 대통령은 “세계 어떤 지역에서도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답함.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9. 17.

■ **라오스 대통령, 北김정은에 홍수피해 위로 전문(연합뉴스)**

- 분양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함경북도에서 발행한 최악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보라치트 대통령은 전문에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부지역에서 2016년 9월초 여러 날 동안 내린 무더기 비와 폭풍으로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외부와의 연계(연계)가 두절되어 인민들의 생명·재산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큰 슬픔 속에 접하였다”고 밝힘.
- 앞서 AFP통신은 북한 함경북도 일대를 강타한 홍수로 133명이 숨지고 395명이 실종됐으며, 3만5천500가구 이상이 홍수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2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해 보도함.

■ **美·中 안보리 상임국 복핵 규탄…“북, 6자회담 재개 호응하라”(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이른바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이 5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나섬.
- 이들 5개국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제7차 ‘핵무기 보유 5개국’(P5) 회의를 열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는 한편,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분야에서의 진전 상황을 평가함.
- 이들 5개국은 회의를 마친 후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함. 공동성명은 먼저 “P5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들과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의 합의를 위반한 채 감행한 북한의 1월6일과 9월9일의 핵실험들, 그리고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실험 및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밝힘.

2016. 9. 19.

■ **반기문, 北핵·미사일 심각 우려…강경·분명한 의지 보여야(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해 다시 우려를 보이며 국제사회에서 이런 북한의 행동에 대해 “강경하고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함.
- 18일(이하 현지시간) 보수성향 미국 신문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반 총장은 지난 15일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성공적으로 다섯 번 실험했다”며

“그들(북한)은 더 작고 가볍고 사거리가 길면서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함.

- 그는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 방향이나 분위기는 더 강경하고 분명한 대북 메시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2016. 9. 20.

■ **北, 옛소련 벨라루스에 대사관 개설 추진...외교고립 탈출 시도(연합뉴스)**

- 북한이 옛 소련권 외교공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러시아에 이웃한 벨라루스에 대사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벨라루스 외무부는 19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을 통해 안드레이 그린케비치 아시아·오세아니아국 국장이 이날 벨라루스를 방문한 오승호 북한 외무성 제3국장과 회담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북한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도 대사관을 재개설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짐. 지난 1992년 카자흐스탄에 개설됐던 북한 대사관은 1998년 폐쇄된 바 있음.

2016. 9. 21.

■ **G7 외교장관, 北도발 맞서 중대한 추가 조치 취할 것(연합뉴스)**

-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이에 맞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
- G7과 유럽연합(EU) 외교 수장들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만난 후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최근 진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밝힘.

■ **이집트·볼리비아·탄자니아...옛 친북국가 북핵실험 규탄 동참(연합뉴스)**

- 북한의 ‘비밀 언덕’이었던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등지의 옛 친북성향 국가들이 속속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한 규탄 대열에 동참하고 있음.
- 중남미의 볼리비아는 올 1월 4차 북핵 실험 후 처음 규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5차 핵실험 후 닷새만인 지난 14일 규탄 성명을 발표함. 이집트 외무부는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당일인 지난 9일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함.

- 이집트 외무부는 공식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그러한 행위(핵실험)는 핵확산 금지 체제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굳건히 하려는 노력을 훼손한다”고 꼬집음. 이와 함께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도 북한을 비판하는 대열에 동참함.

2016. 9. 22.

■ 北, 벨라루스에 대사관 개설...벨라루스는 부인(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에 이웃한 벨라루스에 대사관을 개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하지만 벨라루스 당국은 이 같은 보도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북한) 외무성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실무대표단이 벨라루씨(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에 따라 18일부터 20일까지 벨라루씨를 방문하였다”면서 “방문 기간 대표단은 벨라루씨 외무성 국장과 협상을 진행하고 이 나라 주재 조선 대사관 개설식에 참가하였다”고 밝힘.
- 북한은 옛 소련에서 독립한 벨라루스와 지난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지금까지 무역성 산하 무역대표부만 뒀을 뿐 외교 공관을 개설하지는 않았음.

■ 핵실험금지조약 40여국, 유엔서 “北 핵실험 중단하라”(연합뉴스)

-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여한 40여 개국 외교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동의하는 40여 개국 외교부 장관들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의 경고에도,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을 일제히 규탄했다고 유엔 관계자가 전함.
-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21세기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라며 2006년~2016년 이뤄진 5차례의 핵실험을 언급한 뒤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힘.

■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北 김정은에 홍수피해 위로 전문(연합뉴스)

-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홍수피해와 관련해 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카스트로 의장은 전문에서 “귀국에서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꾸바(쿠바) 당과 정부, 인민의 이름으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문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앞서 분양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도 홍수피해와 관련해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게 위문 전문을 보냄.

2016. 9. 23.

■ **중견국협의체 ‘믹타’ 외교장관 “北 추가도발 말라” 성명(연합뉴스)**

-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는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외교부 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힘.
-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 외교부 장관은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함.
- 성명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 안보리 결의 2270호(3월 2일 채택) 내용을 인용한 뒤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포함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엄중한 현시점에 우리는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지지 안보리 결의안 채택 무산 위기(연합뉴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지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이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21일(뉴욕 현지시간) 밝힘.
-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자국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결의안 채택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 채택되리란 보장이 없다”고 전함.
- CTBT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준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서둘러 절차를 마쳐주길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은 당초 이번 주 채택될 예정이었음.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9. 17.

■ **北 풍계리 핵실험장 서·남 갱도서 언제든 추가 핵실험 가능(연합뉴스)**

-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있는 미사용 갱도에서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17일(현지시간) 밝힘.
- 38노스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인 15일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내놓으며 이같이 말함.
- 38노스는 "4번째 핵실험이 이뤄진 북쪽 갱도에 터널이 더 있는지 알 수 없고, 게다가 서쪽과 남쪽 갱도에 사용하지 않은 터널이 있다"며 "이는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함.

2016. 9. 20.

■ **北, 신형 위성로켓 엔진시험 대성공…장거리 미사일 도발 예고(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엔진 분출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새형(신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시험에서 대성공했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함.
- 이날 김정은의 시찰은 현지에서 리병철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식 당 부부장을 비롯한 당 책임일꾼들과 국가우주개발국 관계자들이 맞음.

2016. 9. 21.

■ **美ISIS, 北영변 핵단지 활동 지속…재처리 일단 종료된듯(연합뉴스)**

-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서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초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핵물질 플루토늄 추출이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20일(이하 현지시간) 밝힘.
- ISIS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7월 14일과 지난달 28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단지에서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최근 이뤄진 플루토늄 분리 작업은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 연구기관은 북한이 건설 중인 실험용경수로(LWR) 외부에서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으며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이 원자로를 완공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지만, 언제 이 원자로가 완공될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라고 밝힘.

■ **北 풍계리 3번 궤도에 위장막…‘핵·미사일’ 연쇄도발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궤도 뿐 아니라 3번 궤도의 입구에도 대형 위장막을 설치함에 따라 이른 시일내 6차 핵실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백두산'(대포동)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추가 핵실험 등 연쇄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 북한 노동신문이 전날 공개한 '백두산계열의 액체로켓'은 대포동 계열의 장거리 미사일로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대포동 1호는 사거리 2천500km의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1만km의 대포동 2호는 ICBM으로 각각 분류됨.

2016. 9. 23.

■ **핵 전문가 “北, 이른시기에 6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이른 시기에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옴.
-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평화문제연구소(IPA)가 23일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여는 제5차 통일한국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에 나섬.
- 이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위력이 커진 증폭형 핵실험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적 수요와 개량 요소가 비교적 확실하다”고 주장함.

■ **美전문가 “北 대출력 로켓엔진, 소형 달탐사선 발사에 충분”(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대출력 로켓엔진' 시험 장면과 관련해 북한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로켓 엔진이 실제로 소형 달탐사장비를 발사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됨.
- 미국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22일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서 공개한 엔진이 “소형의 무인 달탐사 장비를 발사하기에 충분하며, 정지궤도 통신위성은 물론 다양한 저고도 정찰위성을 발사하는데도 적합할 것”이라고 밝힘.
- 또 그는 북한이 중국에서 설계도를 밀반입하거나 이란으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았을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

■ **北, 구소련 재래식 무기 재활용해 핵실험·미사일 발사(연합뉴스)**

- 북한이 옛 소련에서 확보한 재래식 무기 기술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위한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2011년 10월~2016년 4월 북한 제재 유엔 전문가 패널위원으로 활동한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씨는 23일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미사일 기술을 향상한 배경으로 소련 기술의 재활용을 꼽음.
- 후루카와 씨는 북한이 2012년 12월 쏜 은하 3호(장거리탄도미사일 대포동2 개량형) 낙하물을 한국 해군이 회수해 분석한 결과 압력 변환기 등 14종의 외국제 부품이 60점 이상 나왔고 여기에는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스위스 등의 제품이 포함됐다고 덧붙임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9.19	한미 공군, '레드 플래그'서 北핵시설 정밀타격 훈련(연합뉴스)	
		한미일, 독자대북 제재 검토...6년만에 첫 외교장관 공동성명(연합뉴스)	
		케리 '핵포함 확장억제' 강조 이유는... 韓핵무장론 진화 의도(연합뉴스)	
		北핵사용 압박시 핵전력 선제타격...한미, 3단계 억제전략 실행(연합뉴스)	
	9.22		백악관 "자책 핵무장,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 안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9.20	한·중, 중국 불법어선 공동 감시(연합뉴스)	
	9.21	한중, 22일 베이징서 6자 수석대표 협의...대북제재 조율(연합뉴스)	
		한민국 "中, 대북 안보리 제재 참여 기대 못 미쳐"(연합뉴스)	
	9.22	한중 6자수석 베이징 회동...대북 추가 제재 논의(연합뉴스)	
	9.23	김홍균 6자수석 "중국,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9.23	日, 평창올림픽 때 공안당국자 韓과견...테러·북한 정보 수집(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9.23	軍, 러시아와도 핫라인 추진...미·일·중 이어 4번째(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9.18		中, 미·일 남중국해 합동순찰 가능성에 바짝 긴장(연합뉴스)
	9.20	오바마-리커창, 北핵실험 규탄-유엔안보리 제재 협력키로(연합뉴스)	
		크리스토퍼 힐, 중국내에서 대북 접근법 컨센서스 부족한 듯(연합뉴스)	
	9.21		리커창, 美 대통령 누가 돼도 미중 관계 안정 유지될 것(연합뉴스)
	9.22	백악관 “中, 전략물자 대북수출 차단 안보리결의 충실 이행해야”(연합뉴스)	
9.23	하스 美CFR 회장 “美 中 안보우려 달면 북핵해결 실마리”(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9.21	아베-오바마, 뉴욕서 짧은 대화..“대북제재 결의안 긴밀연대”(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9.18	러, 美주도 연합군 시리아 정부군 오폭 비난..휴전합의는 유지(연합뉴스)	
	9.22		러 “美드론이 구호차량 공습” 책임공방 계속..높에 빠진 시리아(연합뉴스)
	9.23		러 연계 해커, 백악관참모 이메일 해킹..미셀여사 여권정보 유출(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9.22	아베-리커창, 뉴욕서 스탠딩 대화..한중일 정상회의 참석희망(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9.20	中·러 남중국해서 모의 도서탈환훈련..합동훈련 폐막(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9.23	日, 북방영토 2개섬 반환 최저 목표로 러와 협상(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9. 19.

■ 한미 공군, '레드 플래그서 北핵시설 정밀타격 훈련(연합뉴스)

-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공군훈련인 '레드 플래그(Red Flag)'에서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짐.
- 공군 관계자는 18일 "내달 초 시작되는 '레드 플래그'에 공군 11전투비행단의 F15K 6대와 C-130H 수송기 2대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함.
-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미 모두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시나리오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함.

■ 한미일, 독자대북 제재 검토...6년만에 첫 외교장관 공동성명(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함.
-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뉴욕 시내 매리엇 이스트 사이드 호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음.
- 한미일은 이번 회담과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2270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견인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 하며, 북한의 각종 불법활동을 포함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금원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함.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전문】

한미일 외교장관, 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방향성 제시
-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제71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뉴욕 방문의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9.18.(일) 13:30 ~14:30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 금번 회담은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북한 문제 논의에 할애하여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더욱 급박하고 엄중해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압박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2. 3국 장관은 회담 직후 오늘 협의결과를 담은 아래 요지의 3국 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원문 및 비공식 번역문 별첨)

○ 미국의 對韓 방위공약 관련,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든 공약이 포함됨을 재확인

○ 북핵 관련, △국제사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 주도 △불법활동 포함,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제한 강화 위한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 검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3국의 의지 재확인

※ 금번 공동 성명은 2010년 이래 3국 외교장관 차원으로는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유엔 총회 개막 직전 3국이 대북 제재·압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을 선도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확장억제 공약은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됨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금번 5차 핵 실험과 최근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이 시점에서 강력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 첫째,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의 권능을 계속해서 능멸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신규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하여 유엔 안보리의 신뢰와 권능을 입증해야 한다.

○ 둘째,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모든 잘못된 행위와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북한이 맹목적으로 지금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 길이 파멸의 길이 될 것이다.

- 국제사회는 UN 총회 계기를 활용하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며, 동시에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셋째, 북핵 문제라는 난제와 관련된 핵심 이해 관계국으로서, 한미일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지를 계속 결집해 나갈 것이다.

4. Kerry 국무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위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인바, 추가 도발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중단하고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Kerry 장관은 미국의 확고한 對韓 방위공약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와 관련 공동성명에서 미측은 동 방위공약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기시다 외무대신은 이전과는 차원과 다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제사회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바, 새로운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되어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3국 장관들은 한·미·일이 북핵 문제 관련 핵심 이해 관계국(key stake-holders)으로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견인해가기로 하였다.

○ 특히 3국은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신규 결의 채택,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 △여타 대북 압박 조치 추진 관련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가기로 하였다.

6. 또한, 장관들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희소한 자원을 전용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또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금번 유엔 총회를 포함, 국제사회의 논의 모멘텀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고 체계적인 공조를 계속해가기로 하였다.

7. 아울러, 3국 외교장관은 난민,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인권, 개발협력, 전염병,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도전 해결을 위한 3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케리 '핵포함 확장억제' 강조 이유는...韓핵무장론 진화 의도(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핵'을 거명하며 구체적인 대(對) 한국용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t) 공약을 밝혀 주목됨.
- 확장억제는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임.
-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의하면 케리 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미국의 방위공약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 **北핵사용 임박시 핵전력 선제타격…한미, 3단계 억제전략 실행(연합뉴스)**

- 북한의 핵무기 사용 임박시 한미 양국이 정밀 유도무기를 사용해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실제로 추진됨.
- 19일 청와대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협의 과정을 거쳐 ▲ 북한의 핵사용 위협 ▲ 핵사용 임박 ▲ 핵사용 등 3단계별 억제 전략을 실제 작전에서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이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하고 운용연습(TTX) 등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던 억제 전략을 실행하기로 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다음달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3단계 억제 전략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짐.

2016. 9. 22.

■ **백악관 “자체 핵무장,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 안해”(연합뉴스)**

- 존 울프스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미국)의 이익에, 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힘.
- 울프스탈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DC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재단-윌슨센터 공동주최 ‘제4회 한미대화’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함.
- 울프스탈 선임국장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그것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임.

나. 한·중 관계

2016. 9. 20.

■ **한·중, 중국 불법어선 공동 감시(연합뉴스)**

- 해양수산부는 21~27일 중국 불법 어선의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한국과 중국 지도선이 공동 순시 활동을 한다고 20일 밝힘.
-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임.
- 올해 들어 세 번째인 이번 공동 순시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천262t급 무궁화2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3천t급 1303함이 참여함.

2016. 9. 21.

■ **한중, 22일 베이징서 6자 수석대표 협의…대북제재 조율(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은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대북 제재를 포함한 북핵 해법을 논의함.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특별대표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힘.
- 김 본부장은 중국측과 북한의 5차 핵실험(9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해 북핵문제 관련 전반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함.

■ **한민구 “中, 대북 안보리 제재 참여 기대 못 미쳐”(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있기에 대북 안보리 제재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확실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함.
-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이 대북 안보리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함.
- 그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유엔결의안 2270호에 동의하고 함께하기로 한 것인 만큼 참여하는 건 틀림없는데, (북중 국경무역이 활발하다는) 국경 지역에서의 보도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수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관측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함.

2016. 9. 22.

■ **한중 6자수석 베이징 회동…대북 추가 제재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추가 대북제재를 비롯한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방향을 논의함. 한국은 중국에 대북 육로 수송 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반대 입장을 확인하면서 제재 수위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짐.
- 22일 베이징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만찬을 함.

- 김 본부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차 핵실험에 따른 현 상황의 엄중함,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안보리에서의 대응 조치를 포함해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함.
- 베이징 소식통은 “김 본부장과 우 대표가 오후에 면담한 뒤 곧바로 만찬에 들어갔다”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2016. 9. 23.

■ 김홍균 6자수석 “중국,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연합뉴스)

- 한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9일 감행한 5차 핵실험과 관련, 중국이 강력한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힘.
- 이는 향후 안보리 결의안에 한국이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 요구 사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보임. 한국은 그동안 중국에 민수용 광물 수입과 원유 수출의 제한 강화, 전략 물자 금수 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요구해옴.
- 김홍균 본부장은 우다웨이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5시간에 걸쳐 협의와 만찬을 함. 일반적인 협의가 2~3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시간에 걸쳐 북핵 제재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다. 한·일 관계

2016. 9. 23.

■ 日, 평창올림픽 때 공안당국자 韓파견...테러·북한 정보 수집(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 때 공안당국자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안조사청은 평창올림픽에 맞춰 약 2개월간 평창에 직원을 파견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보기관과의 인맥을 구축하고 이슬람국가(IS) 및 올림픽 반대단체의 정보를 수집함.
- 공안조사청은 한국에서 북한에 관한 정보도 수집할 계획임.

라. 한·러 관계

2016. 9. 23.

■ 軍, 러시아와도 핫라인 추진...미·일 중 이어 4번째(연합뉴스)

- 한국과 러시아군이 공군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열린 '제11차 한러 장성급 군사교류회의'에서 공군 핫라인 설치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힘.
- 우리 군은 미국, 일본, 중국 등과는 핫라인이 설치돼 있지만, 러시아와는 아직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9. 18.

■ 中, 미·일 남중국해 합동순찰 가능성에 바짝 긴장(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합동순찰을 진행할 가능성에 중국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임.
- 1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자매지 환구시보는 일본이 미국의 남중국해 순찰 항해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함.
- 전문가들은 일본이 주요 원유수입 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2016. 9. 20.

■ 오바마-리커창, 北핵실험 규탄-유엔안보리 제재 협력키로(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회동해 북핵 문제와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함.
- 백악관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동 사실을 전하면서 “두 사람이 북한의 지난 9일 핵실험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및 양국 간 사법채널을 통한 협력 활성화를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리 총리에게 모든 기업이 중국 내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경쟁의 장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크리스토퍼 힐, 중국내에서 대북 접근법 컨센서스 부족한 듯(연합뉴스)**

-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함.
- 힐 전 차관보는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한 북핵 관련 좌담회에 참석해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중국 내부에서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컨센서스가 부족한 것 같다는 점”이라고 말함.
-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은 (북핵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미국도 중국에 대해 인권개선, 남중국해 문제 해결 등 원하는 게 수없이 많겠지만 (중국이) 핵무장 된 이웃국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첫째 이슈가 돼야 한다”고 강조함.

2016. 9. 21.

■ **리커창, 美 대통령 누가 돼도 미중 관계 안정 유지될 것(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함.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리 총리는 전날(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미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 대선이 미국 내정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할 수 없으며 어떤 후보를 선호하는지도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SCMP가 전함.
- 중국 최고지도자가 미 대선이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016. 9. 22.

■ **백악관 “中, 전략물자 대북수출 차단 안보리결의 충실 이행해야”(연합뉴스)**

-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함.
- 로즈 부보좌관은 이날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에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중국 ‘랴오닝홍상그룹’에 대한 미·중 양국의 제재 공조 관련 질문에 “이 특정 이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은 다양한 물자와 기술의 대북수출 차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힘.
- 또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원하며, 추가 제재를 조래하는 북한의

이런 도발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싶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압박함.

2016. 9. 23.

■ **하스 美CFR 회장 “美, 中 안보우려 덜면 북핵해결 실마리”(연합뉴스)**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대처에 미온적인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대화에 나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우려를 덜어줄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고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주장함.
- 22일(이하 현지시간) CFR에 따르면 하스 회장은 지난 20일 발표한 기고문에서 대북 제재 확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가능성이 낮다고 전제한 뒤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에 집중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냄.
- 북한 핵무기의 확산을 '레드라인'으로 삼으면서 사이버공격 같은 수단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면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북한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계속 떠안아야 하고, 북한을 물리적으로 공격할 경우 한국이나 주한미군, 일본에서 발생할 피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하스 회장은 설명함.

나. 미·일 관계

2016. 9. 20.

■ **아베-클린턴 뉴욕서 회담…미일동맹 강화로 북핵대응 공조(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와 회담을 하고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두 사람은 또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북한의 움직임 및 동·남중국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 미일동맹을 토대로 연대해 대응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모음.
- 통신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현지 한 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이 더 냉엄해지며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일 간 ‘희망의 동맹’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함.

2016. 9. 21.

■ **아베-오바마, 뉴욕서 짧은 대화…“대북제재 결의안 긴급연대”(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위해 긴밀하게 연대해 가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유엔본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잠시 만나 이런 내용의 짧은 대화를 나눔.

다. 미·러 관계

2016. 9. 18.

■ 러, 美주도 연합군 시리아 정부군 오폭 비난…휴전합의는 유지(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 정부군 오폭 사건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의 시리아 휴전 합의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7일(미국 동부 시간) 연합군 오폭 사건 이후 러시아 측의 요구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 공군이 19일부터 합동 공습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틀만 기다려 우리 공군과 조율을 한 뒤 필요한 자들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그들(연합군)은 비이성적 작전을 결정했다”고 비난함.
- AP 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의도치 않은 시리아군의 인명손실에 대해 미국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전함.

2016. 9. 22.

■ 러 “美드론이 구호차량 공습” 책임공방 계속…눈에 빠진 시리아(연합뉴스)

- 시리아에서 국제기구 구호차량이 폭격을 받은 일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가 상대방 책임이라고 서로 비난하면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음.
- 또한 미국이 시리아 인접국 터키와의 관계를 악화할 수 있는 쿠르드족에 대한 직접 무장 지원을 검토하면서 시리아사태는 더욱 꼬여가고 있음.
-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공동의장을 맡은 국제시리아지원그룹(ISSG)은 오는 23일 예정했던 회의를 하루 앞당겨 22일 만날 예정임.

2016. 9. 23.

■ 러 연계 해커, 백악관참모 이메일 해킹…미셀여사 여권정보 유출(연합뉴스)

-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백악관도 해킹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여사의 여권정보 등이 고스란히 노출됨.
- 러시아 해킹조직으로 추정되는 'DC리크스'는 22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 참모인 이안 멜롤의 지메일 계정을 해킹해 그가 내부 및 외부 인사들과 주고받은 대량의 이메일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함.
-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해킹된 여권이 실제 미셸 여사의 여권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백악관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함.

라. 중·일 관계

2016. 9. 22.

■ 아베-리커창, 뉴욕서 스탠딩 대화…한중일 정상회의 참석희망(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유엔총회를 계기로 짧은 대화를 나눔.
- 2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리 총리와 몇 분간 서서 대화하며 북한 문제에 관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긴밀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언급함. 리 총리는 이에 “동북아시아의 문제는 일본과 협력하고 싶다”고 반응함.
- 아베 총리는 올해 일본에서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거론하고서 “일본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리 총리는 “예정대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답함.

마. 중·러 관계

2016. 9. 20.

■ 중·러 남중국해서 모의 도서탈환훈련…합동훈련 폐막(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섬을 탈환하는 훈련을 마지막으로 8일간에 걸친 연례 해군 연합훈련을 끝냄.
- 20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해군 합동훈련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18일 각종 군함과 잠수함, 수륙양용 장비 등을 동원, 해상의 도서, 암초를 탈취해 점거하는 훈련을 실행함.
- 리상둥(李向東) 상륙부대 부지대장은 “이번 훈련에서는 양군 해군의 지휘관리, 통신협

조, 정보공유 능력을 보여줬다”며 “이전 훈련에 비해 올해 훈련은 함정간, 잠수함간 대치와 육상방어에 대한 공격 같은 상황에 비중을 두고 치러졌다”고 말함.

바. 일·러 관계

2016. 9. 23.

■ 日, 북방영토 2개섬 반환 최저 목표로 러와 협상(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가운데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두섬을 인도받는 것을 하한선으로 러시아와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함.
- 그동안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를 포함한 북방영토 4개섬의 반환을 고수해 옴.
- 일본과 러시아는 대신 1956년 소일공동선언으로 국교를 회복하면서 “평화조약 체결 후 시코탄, 하보마이를 인도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후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9.18	‘북한인권영화 축제’ 워싱턴DC서 19일부터 개최(연합뉴스)
	9.19	유엔인권이사회서 北 비관 이어져…국제규약 지켜야(연합뉴스)
		‘북한 인권법 실천’ 탈북단체 연합 발족(연합뉴스)
	9.20	EU “북 인권 개선, 대북 정책 핵심”(자유아시아방송)
		UNHRC 대표, 북한 인권상황 우려 표명(자유아시아방송)
	9.22	[단독]유엔 北보고관, 고위층 탈북에 인권 문제 있었다면 확인 필요(연합뉴스)
		폴란드, 자국기업 北노동자 400여명 노동실태 조사(연합뉴스)
북한망명센터, 스페인서 北인권 사진전시회 개최(연합뉴스)		
9.23	[단독] 현대판 노예 해의 北노동자 문제, 국제안보기구서 첫 공식논의(연합뉴스)	
	성매매·감시원과 성관계 강요…中과견 北여성 성적학대 심각(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9.18	北, 남조선은 생지옥 억지…北인권법 반발(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9.19	북한인권대사, 北해외노동자 노예제 버금…北인권개선 노력(연합뉴스)
	9.20	정부 “北해외노동자 문제, 국제사회 협력해 다각대응 모색”(연합뉴스)
	9.22	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 나서야(연합뉴스)
김도읍, 탈북자 자살 해마다 는다…가정불화 최대(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문포로	9.21	심재권, 작년 北이탈주민 여성비율 처음으로 80% 넘어(연합뉴스)
대북지원	9.17	유엔기구, 올해 北함경북도 수해 50~60년 사이 최악(연합뉴스)
	9.18	통일부 “대북 수해지원, 피해상황과 북한 요청 고려해 검토”(연합뉴스)
		북민협, 北 수해지원 목적 제3국 대북접촉 신청(연합뉴스)

9.19	통일부, 北이 수해지원 요청해도 지원 가능성 낮아(연합뉴스)
	유엔, 北수해 긴급지원 모금...300억원 필요(연합뉴스)
9.20	[단독]北해외근로자, 산업재해·질병·자살로 올해만 최소 40명 희생(연합뉴스)
	통일부, 북민협 수해지원 목적 대북접촉 신청 불허(연합뉴스)
9.21	유엔, 北수해 2차 실사단 파견...피해규모 충격적(연합뉴스)
	유엔 특별보고관, 北 태풍피해 주민 국제사회 지원 촉구(연합뉴스)
9.22	민화협, 北 수해지역 어린이 지원 모금운동할 것(연합뉴스)
	FAO, 北 올해 쌀 수확량 240만t 전망...작년보다 증가(연합뉴스)
9.23	北함경북도 수해지역 식량가격 두 배 폭등(연합뉴스)
	북한주재 유엔기구, 구호기금에 北수해복구 자금 요청(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9. 18.

■ ‘북한인권영화 축제’ 워싱턴DC서 19일부터 개최(연합뉴스)

- 북한인권단체인 ‘노체인’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워싱턴DC 일대에서 12편의 북한 인권 관련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상영하는 ‘빛 축제’를 개최함.
- 오는 19~21일과 26~28일 열리는 이 축제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한미연구소, 허드슨연구소 등 한국과 미국, 유럽, 캐나다, 한국 2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 또는 후원함.
- 북한 요덕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영화제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암흑의 북한 독재를 끝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2016. 9. 19.

■ 유엔인권이사회서 北 비판 이어져...국제규약 지켜야(연합뉴스)

- 20일(현지시간) 시작하는 유엔총회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또다시 북한의 핵실험과 인권 상황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음.
- 유엔인권이사회 제33차 정기총회 5일째인 이날 참가국들은 오전에 시리아 인권 상황을 논의한 뒤 오후에는 인권을 주제로 자유 발언을 함. 각각 2~3분이 주어지는 발언 시간에 한국과 미국, 일본 외에 영국, 호주, 독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체코 등 10여 개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함.
- 한편 이날 시리아 관련 토론과 오후 일반 토론에는 한동안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도 모습을 드러냄.

■ ‘북한 인권법 실천’ 탈북단체 연합 발족(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와 핵도발을 반대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탈북자 단체가 발족함. 탈북자 단체들로 이뤄진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 발대식이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밝힘.
- 이번 행사에는 탈북자 단체 대표 40명과 탈북자 1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짐. 외빈으로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이인제 전 의원 등이 자리할 예정임.

-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핵실험을 감행한 김정은을 규탄하는 구호 및 퍼포먼스, 북한 인권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 등이 소개됨.

2016. 9. 20.

■ **EU “북 인권 개선, 대북 정책 핵심”(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은 20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Human Rights and Democracy: EU Annual Report 2015)에서 북한 인권 향상을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강조함.
- 유럽연합은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관련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주요 행사에 참석하고 동반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함.
- 유럽연합은 이 외에도 북한의 식량안보,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일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힘.

■ **UNHRC 대표, 북한 인권상황 우려 표명(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과 6월, 9월에 정기회의를 열고 있음. 최경림 대사는 지난 1월부터 1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 개막연설에 나선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해 눈길을 끄. 특히 자이드 최고대표는 모든 공공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제한, 방대하고 잔인한 수용소 체제, 고문, 식량권과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 등을 지적함. 또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과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함.
- 한편, 13일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33차 정기회의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임.

2016. 9. 22.

■ **(단독)유엔 北보고관, 고위층 탈북에 인권 문제 있었다면 확인 필요(연합뉴스)**

-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21일(현지시간) “고위층 탈북에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내 임무다”라고 말함.
- 오헤아 키타나 보고관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고위층 탈북 문제는 정치적인 스펙트럼에 속하겠지만, 만약 그들이 북한을 떠나기로 한 배경에 인권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그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망명 등 북한 외교관들의 잇따른 탈북이 북한 체제의 위기 징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임무는 인권 문제에 국한돼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북한 고위층이 직면하는 내부적 인권 문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함.

■ 폴란드, 자국기업 北노동자 400여명 노동실태 조사(연합뉴스)

- 폴란드 당국이 자국 내 15개 기업의 북한 노동자 400여 명에 대해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 야로스와프 레쉬니에프스키 국장은 최근 바르샤바에서 가진 RFA와 인터뷰에서 “14곳은 감찰이 마무리됐고 나머지 한 곳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올해 조사는 불만이 추가로 접수되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함.
- 폴란드는 또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음.

■ 북한망명펜센터, 스페인서 北인권 사진전시회 개최(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사진전시회가 스페인에서 열림.
- 오는 25~30일 스페인 오렌세에서 열리는 제82차 국제펜클럽 총회에 북한망명펜센터 작가 2명을 파견해 북한 인권 관련 사진 전시회를 연다고 북한망명펜센터가 22일 밝힘.
- 이번 스페인 행사에서는 북한 인권을 다룬 영문판 문학지 200권과 USB에 담은 제작물 등도 선보일 예정임.

2016. 9. 23.

■ [단독]‘현대판 노예’ 해외 北노동자 문제, 국제안보기구서 첫 공식논의(연합뉴스)

- 해외에 파견돼 이동의 자유 없이 저임금과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처럼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22일 안보 관련 국제기구의 연례회의에서도 처음으로 공식 논의됨.
-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르 사무총장은 이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주적 제도와 인권사무소(ODIHR)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인권 관련 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 관심을 끌었음.
- OSCE는 유럽안보를 위한 협력체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토) 회원국과 구소련 국가들 및 모든 유럽국가를 포괄하는 범유럽 기구로, 냉전 시대인 1975년 헬싱키에서 동서 간 대화증진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해 창설됨. 현재는 유럽의 민주주의 증진과 무기통제, 인권보호, 긴장완화, 분쟁방지를 목적으로 활동 중이며 오스트리아 빈에 사무국이 있음.

■ 성매매·감시원과 성관계 강요...中파견 北여성 성적학대 심각(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나 공장에 파견된 북한 여성들이 심각한 성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북한 소식통이나 중국인 사업가를 인용해 2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들은 식당 손님과의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감시역을 맡은 북한 보안요원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 여성 약 300명을 고용한 단둥의 중국인 기업가는 “보안요원으로부터 여성노동자의 중절 수술을 할 병원을 소개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증언함.
- 소식통은 북중 접경인 지린(吉林)성 투먼(圖門)의 경제개발구에 파견된 여성이 시내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했고 담당한 의사는 여성이 “생활을 위해 온 중국에서 중절까지 하게 될 줄이야”라며 울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함.
- 북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은 작년 9월 작성한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외화를 얻으려고 노동자를 해외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 연간 최대 23억 달러(약 2조5천371억원)를 얻고 있다고 지적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9. 18.

■ 北, 남조선은 생지옥 역지...北인권법 반발(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의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한 대응으로 ‘남조선은 사람 못살 인간 생지옥’이라는 역지 주장이 담긴 백서를 발표함.
-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17일 원고지 약 70매 분량의 백서에서 “오늘 남조선에서는 ‘지옥 같은 세상’을 의미하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더욱 유행되는 속에 박근혜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원한과 저주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이 한국의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담기구인 남조선인권대책협회를 앞세워 백서를 내놓은 것은 지난 4일 공식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9. 19.

■ 북한인권대사, 北해외노동자 노예제 버금…北인권개선 노력(연합뉴스)

-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이정훈(55)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일 유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이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 라면서 이같이 말함. 특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임금의 상당 부분을 당국에 상납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노예제도에 버금가는 문제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있다”고 지적함.
- 이 대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상당 수준의 지적은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결국 인권개선을 위해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함.

2016. 9. 20.

■ 정부 “北해외노동자 문제, 국제사회 협력해 다각대응 모색”(연합뉴스)

- 정부는 20일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협력하면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함.
- 아울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올해 3월 초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고 상기함.

2016. 9. 22.

■ 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 나서야(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장관은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요구함.
- 윤 장관은 이날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열린 '인권 주류화를 통한 분쟁 예방 고위급 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지속하면 분쟁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유엔총회는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 김도읍, 탈북자 자살 해마다 는다..가정불화 최다(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22일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해마다 증가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김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이탈 주민의 자살은 2013년 1명, 2014년 2명, 2015년 9명, 2016년 8월 현재 4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 김 의원은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이탈주민지원에 대한 정부정책과 부처 간 업무협조 등을 파악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9. 21.

■ 심재권, 작년 北이탈주민 여성비율 처음으로 80% 넘어(연합뉴스)

- 작년에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1천25명으로 전체 1천276명의 80.3%를 차지함.
- 심 의원은 “정부는 기존에 운영되는 탈북여성 특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안정적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도 법적 지위가 보장되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

5. 대북지원

2016. 9. 17.

■ 유엔기구, 올해 北함경북도 수해 50~60년 사이 최악(연합뉴스)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최근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50~60년 사이 최악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북한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북한 주재 OCHA는 16일 공개한 ‘2016년 함경북도 합동 실사’ 보고서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로) 함경북도 무산에서는 5만 가구 이상, 연사군과 회령시는 각각 1만~5만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이번 보고서는 유엔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사, 북한 주재 유럽 비정부기구 관계자, 북한 당국자를 포함해 총 22명이 지난 6~9일 함경북도 수해 지역을 답사한 내용과 북한 당국에 대책을 촉구하는 권고 등을 담았음.

2016. 9. 18.

■ 통일부 “대북 수해지원, 피해상황과 북한 요청 고려해 검토”(연합뉴스)

- 통일부는 18일 북한의 수해와 관련해 “우선 피해 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수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히고 “수해 지원 등 긴급 구호성 인도지원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 시급성, 필요성 등과 함께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함.
-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 혹은 민간단체에 수해 지원을 요청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북민협, 北 수해지원 목적 제3국 대북접촉 신청(연합뉴스)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대규모 수해로 고통을 받는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제3국 대북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18일 알려짐.
- 통일부 관계자는 “북민협 소속의 한 단체가 지난 5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수해 관련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했다”며 “이에 대해 통일부는 수리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북한 주재 OCHA는 ‘2016년 함경북도 합동 실사’ 보고서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로) 함경북도 무산에서는 5만 가구 이상, 연사군과 회령시는 각각 1만~5만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날 보도함.

2016. 9. 19.

■ 통일부, 北이 수해지원 요청해도 지원 가능성 낮아(연합뉴스)

-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수해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힘.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부가) 지원에 나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긴급구호의 국제적인 원칙은 해당 국가가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당 국가가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로 알고 있다”고 말함.
- 정 대변인은 “현재까지 북한의 (수해 지원) 요청이 없고, 앞으로도 요청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북한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이것(수해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덧붙임.

2016. 9. 20.

■ **유엔, 北수해 긴급지원 모금...300억원 필요(연합뉴스)**

- 유엔이 최근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 함경북도의 6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2천820만 달러(약 316억 원)가 필요하다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모금에 나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함.
- 평양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모금액을 앞으로 6개월간 함경북도 회령시와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등 6개 지역의 수재민 60만 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전날 낸 성명을 통해 밝힘.
- 피해가 가장 심했던 회령시와 무산군, 연사군에는 수재민 8만 명을 대상으로 임시 숙소와 주방용품을 제공하며 학생 약 1만 명에게 학용품 등도 분배할 계획이라고 유엔은 밝힘.

■ **(단독)北해외근로자, 산업재해·질병·자살로 올해만 최소 40명 희생(연합뉴스)**

-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대규모로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 가운데 작업장 내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산업재해)와 자살, 질병 등으로 올해만 최소 4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짐.
- 또 북한 당국이 김일성·김정일 기금 등 각종 명목으로 해외 근로자들에게 상납을 강요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과도한 상납금을 채우기 위해 주재국에서 대부를 받아 송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의 해외근로자 실태에 정통한 소식통은 20일 “과도한 노동과 작업장 내 안전장비 미비 등으로 북한의 해외근로자들 사이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엄격한 통제와 과도한 임금착취, 비인간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살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고 말함.
- 대북 소식통은 “5만8천명의 북한 근로자가 1인당 월 1천달러를 번다고 가정하면 북한

해외근로자의 연간수입은 6억9천만달러”라며 “이 가운데 80%를 북한 당국이 상납금으로 공제한다고 보면 북한 당국이 근로자 해외 파견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외화수입은 5억5천만달러(약 6천155억원)로 추산된다”고 말함.

■ 통일부, 북민협 수해지원 목적 대북접촉 신청 불허(연합뉴스)

- 통일부는 20일 대북 수해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불허함.
-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에 대해 오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수리 거부를 통지했다”고 밝힘.
- 통일부는 북민협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법상 민간단체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2016. 9. 21.

■ 유엔, 北수해 2차 실사단 파견...피해규모 충격적(연합뉴스)

- 유엔이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2차 합동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1일 보도함.
- 평양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의 마리아 스톤-홀스트 담당관은 VOA에 “북한 내 인도주의 기구들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가조사단이 파견됐다”며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의 도로가 개방된 뒤 현지에 들어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함.
- 스톤-홀스트 담당관은 “이들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한편 수재민들에게 구호품을 분배하고 감시하는 활동도 돕고 있다”고 덧붙임.
- 한편, 국제적십자사는 함경북도 피해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1천550만 달러(약 173억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VOA가 알림.
- 국제적십자사는 이 규모의 자금이 모금되면 북한 조선적십자사회와 협력해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등 6개 지역의 수재민 2만8천 명을 1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임.

■ 유엔 특별보고관, 北 태풍피해 주민 국제사회 지원 촉구(연합뉴스)

-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현지시간) 제10호 태풍 라이온록으로 피해를 본 북한 북동 지역 주민을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함.
- 키타나 보고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태풍으로 138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임신부와 장애인, 노약자 등을 포함한 1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함.

- 그는 또 “북한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허용하고 수용시설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호 활동가들이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함.

■ 민화협, 北 수해지역 어린이 지원 모금운동할 것(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21일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두만강 수해 지역 어린이, 소년소녀들에게 방한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국민 모금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힘.
- 민화협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구매에서 배송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방한복을) 구매해 국경 지역에 보관하고 정부의 허가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임.
- 단체는 “수해 지역 1만7천 가구가 완전히 수몰됐다면 한 가구당 한 명의 어린이이만 있어도 1만7천명”이라며 “특히 모금에 종교계의 성원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함.

2016. 9. 22.

■ FAO, 北 올해 쌀 수확량 240만 전망…작년보다 증가(연합뉴스)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올해 쌀수확량이 240만으로 작년보다 50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FAO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 날씨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며 이같이 밝힘. 보고서는 지난 8월 말 함경북도 지역에 홍수 피해가 있었지만, 전체 북한 농토 약 2만7천411ha 중 2%에 불과하다고 설명함.
- FAO 피어로 콘포르티 분석관은 “북한의 식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곡물 보관용 시설 확충, 가난한 농촌 지역에 대한 기술과 장비 지원 등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 北함경북도 수해지역 식량가격 두 배 폭등(연합뉴스)

- 홍수 피해가 발생한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식량 가격이 수해 전의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프레스는 “회령시와 온성군 남양지구의 쌀과 옥수수 가격이 (수해 이전인) 지난 8월 말의 1kg당 각각 4천300원, 1천원대에서 현재 약 8천원, 2천원으로 올랐다”고 밝힘.
-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는 RFA에 “(해당

지역의) 교통마비 현상이 매우 심하다. 철도와 자동차 길이 거의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소비해야 하는 식량 유통이 잘되지 않아 쌀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함.

2016. 9. 23.

■ **북한주재 유엔기구, 구호기금에 北수해복구 자금 요청(연합뉴스)**

- 북한 주재 유엔 산하 기구들이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에 함경북도 지역 수해 복구지원 자금을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크리스텔 루프포레스트 CERF 공보관은 지난 21일 VOA에 “(수재민)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번 주에 관련 신청서를 받았다”며 “기준에 맞춰 신청서를 심사한 뒤에 최대한 빨리 (지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수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악용하고 있다”며 “수해 지원을 받으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우리를 무서워하고 유엔도 도와주고 있다’고 주민에게 과장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